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6. 11. 10.[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2-6788-3201 / 강지형 보좌관(이강일의원실) 02-784-9401

배민·쿠팡, 6,319억 과징금 겸허히 수용하고 자영업자·소비자 실효적 피해보상 대책 마련하라!

2026년 11월 10일 (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독과점 갑질 낱낱이 드러나 … 최혜대우 강요·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행위 강력규탄**
- **과징금은 제재의 시작일 뿐,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뒤따라야**
- **반복되는 플랫폼 갑질 근절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이 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1월 10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위원장, 배달앱 책임의원인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김남근 의원, 이훈기 의원 및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며 과징금 수용, 피해보상 대책 마련,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19억 원(배민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했다.

양사는 타사 대비 불리하지 않은 가격을 강요하고 불응 시 혜택에서 배제(디배징)해 입점업체 매출을 최대 60~70% 급감시켰으며, 자체배달 강제 유도 및 할인 분담액 수수료 징수 등 부당 이득을 챙겨 그 부담을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양대 플랫폼의 약탈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최혜대우 강요는 구한말 불평등 조약처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계약의 자유를 빼앗는 약탈적 행위"라며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정기국회 내 '플랫폼 민생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배달앱 책임의원은 “무료배달 배제(디뱃징), 자체배달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조작, 점주 할인액 수수료 착취 등은 혁신이 아닌 명백한 시장 약탈”이라 지적하며 “소송 뒤에 숨지 말고 공정위 처분을 무조건 수용해 대국민 사과와 수수료 대폭 인하, 실질적 피해보상안을 제시하라”고 경고했다.

박홍배 의원은 “음식은 사장님이 만들고 가격은 플랫폼이 정하는 기형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수수료 부담 경감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이뤄지도록 정무위 차원에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그동안 미국 일부 통상 압박과 눈치 보기로 플랫폼 제재와 입법이 지연됐으나 이번 처분으로 정부의 각오가 확인됐다”며 “국회 역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신속히 처리해 플랫폼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이훈기 의원은 “하루 15시간 일해도 수수료를 떼이면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현장에 가득하다”며 “과징금 불복 소송과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광고 등 법망을 농락하며 유통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쿠팡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주최 단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공정위 처분 수용 및 대국민 사과 ▲약탈적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소비자 실질 피해보상 대책 제시 ▲입점업체의 자율적 가격·배달방식 선택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끝)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온라인 플랫폼법
수수료 상한제법
즉각 제정하라
소비자·자영업자
노동자 모두 피해
배민 쿠팡만 이득
중개수수료
멤버십 요금 인하
피해 보상하라
수수료 부담
음식가격 폭등
배달앱이 책임져라
대한민국국회
배달앱 공정위 처분 입장에 대한 국회·자영업자·시민사회 규탄 기자회견
배달의민족 coupang 최혜대우 갑질 책임 회피 규탄한다!
6천억 과징금 수용! 자영업자·소비자 보상대책 제시!


소비자·자영업자
노동자 모두 피해
배민 쿠팡만 이득
중개수수료
멤버십 요금 인하
피해 보상하라
수수료 부담
음식가격 폭등
배달앱이 책임져라
대한민국 국회
배달앱 공정위 처분 입장에 대한 국회·자영업자·시민사회 규탄 기자회견
배달의민족 coupang 최혜대우 갑질 책임 회피 규탄한다
6천억 과징금 수용! 자영업자·소비자 보상대책 제시